

# 민주 대선 후보 9월 23일 선출

### 최고위 잠정안 마련...8월 25일 제주 첫 스타트

### 지역별 가중치 없애기로...호남 경선 관심 집중

민주통합당은 오는 9월 23일 제18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컷-오프 방식과 시기, 본선에서의 결선 투표제 도입 등 세부 틀을 놓고는 대선 주자들의 이견이 큰 상황여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 강기정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갖고 오는 8월 25일 첫 경선을 시작, 9월 23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8월 10일 경선에 들어가 9월 25일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위탁 기한이 한 달 이내라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일정을 다시 조정했다. 또, 경선 후보가 6명을 넘을 경우 컷-오프(예비 경선)를 실시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바일투표의 경우 8월 초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 경선이 실시되는 기간 세 차례에 나눠 결과를 발표해 현장투표 결과와 취합하기로 했다.

모바일투표와 별개로 희망자에 한해 현장투표를 실시하고, 경선의 흥행을 위해 대의원과 당원에 대해 경선 당일 현장투표를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또, 모바일 투표와 당원 및 대의원 투표 여부에 상관없이 1인1표제를 적용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대선후보 등의 의견 수렴과

정을 거쳐 구체적인 반영비율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경선 투표에서 지역 및 인구별 가중치를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경선 지역은 2002년과 2007년의 전례를 감안해 제주도에서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과 전북 등 호남지역 경선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호남 민심이 민주당 경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남 지역 경선 순서는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선 세부 틀을 둘러싼 대선 주자들의 입장 차가 크다는 점에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틀 확정을 20일로 당기고 컷-오프 시기를 런던 올림픽 개막(27일) 이전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일부 대선 주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8월 25일 본선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런던 올림픽이 폐막하는 8월 12일 이후에 컷-오프를 진행해도 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경선의 연속

성으로 국민적 관심을 더 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국민 70%, 당원 30%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관련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원 참여가 50% 정도는 해야 하고 컷-오프가 인지도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방송 토론회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컷-오프에서의 1인 1표제에 대한 불만도 크다. 1인 2표제를 시행, 국민과 당원에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대선 후보들은 본선에서의 결선 투표 도입 등도 주장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강창희 국회의장(왼쪽에서 두번째), 박병석 부의장(맨 오른쪽)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맨 왼쪽),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창립총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인사말을 들던 중 밝게 웃고 있다.

## “이석기 중복IP 투표로 58% 득표”

### 검찰 “총체적 부정선거”...본격 수사 착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로 얻은 전체 득표수 가운데 58.8%가 2개 이상 중복 아이피(IP)에서 투표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한 IP에서 투표한 당원 모두 이 의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4일 투표인

명부와 온라인 투표 IP 등이 들어 있는 서버 분석 작업을 마친 결과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IP에서 2회 이상 투표를 한 사례는 총 3천654건, 5회 이상은 885건, 10회 이상은 372건으로 드러났다. 50회 이상 투표한 사례도 27건, 100회 이상 투표가 이뤄진 것도 8건이나 됐다.

검찰은 중복 IP 상위 30위 이내를

조사한 결과 한 IP에서 최대 286건의 투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100%인 경우는 총 12건으로 드러났다. 동일 후보자 득표율이 80% 이상인 경우는 21건에 달했다.

일례로 전남지역의 한 IP에서는 286명이 투표했는데 한 후보자가 286표를 모두 득표했으며, 제주 지역에서도 270명이 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례가 드러났다. 전북 지역의 한 IP로는 총 82명이 투표했는데 모두 이석기 의원에 투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복 IP투표 사례가 전국에 퍼져 있는 만큼 IP 소재지의 검찰청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 민주 수석사무부총장

### 김승남 의원 임명



민주통합당은 4일 김승남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사무부총장은 지난 1993년 민주당에 입당한 뒤 부대변인, 중앙위원,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했다. 이번 4·11총선에서 고흥·보성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서구 의장후보 경선 ‘인증샷’ 소동

### 민주당 소속 의원 당내 경선 중

### 탈락 후보 “경선 무효” 주장도

광주·전남지역 광역·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광주 서구의 지방의회에서는 민주당 당 내 의장 후보 경선 중 ‘인증샷’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 서구의회 민주당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일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당내 후반기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통합진보당 4명·무소속 2명·민주당 소속 의원이 간신히 과반인 점을 고려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이었다.

이날 경선 결과 장재성(가 선거구)의원이 4표를 얻어 2표를 얻은 양영애(라 선거구) 의원을 누르고

후보로 선출됐다. 기권 1표.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강인택(나 선거구)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간 뒤 ‘찰칵’ 하고 사진을 찍는 소리가 나면서 ‘인증샷’ 논란이 불거졌다.

경선에서 탈락한 양 의원이 “왜 사진을 찍느냐”며 경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 강 의원은 기표한 뒤 공식적인 해명 없이 곧바로 본회자리를 떠나면서 ‘인증샷’ 논란은 확산됐다. ‘인증샷’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은 4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셔터 소리가 났을 뿐 인증샷을 찍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선관리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아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선관위

는 “위탁선거가 아닌 당내 행사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경선관리위원회는 ‘인증샷’을 단순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경선 결과대로 후보를 추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증샷’에 대한 시비가 끝나지 않으면서 후보로 선출된 장 의원과 탈락한 양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당 소속 의원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5일 열릴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는 민주당 후보 3명과 통합진보당 후보 1명이 맞붙게 됐다.

한편, 경선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은 광주시당은 양 의원이 후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제명 조치를 검토하고, 투표용지를 활용한 강 의원의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정가 라운지

### 주영순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비례)이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 의원은 4일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응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은 물론 이력서에 사진 부착이나 제시, 제출 등도 함께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모집·채용 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아 ‘능력’보다는 ‘외모’가 중요시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취업성형’ 붐이 이는 등 ‘외모지상주의’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외모보다는 능력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취업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원혜영 “남북경협 정경분리하자”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4일 7·4 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 경제협력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했다. 이 개정안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법 7조2항의 ‘남북 경제협력’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 경제협력’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출마를 선안한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경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박인숙, 교사 폭행 징역형 추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4일 교원을 때린 사람에게 최고 2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담당 경찰청 사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학교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 카드대금 “즉시결제”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중고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 귀하를 위한 품격있는 골프장

친환경 나비고장 환경에 오시면 사계절 양건다. 한쪽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어서 컨트리클럽이 여러분의 삶에 여유로움과 잊지 못할 추억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다이내스티CC에서 **홀이원 대박을!!**

로또 누락방지 홀이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항공다이내스티CC에서 최소 시드머니 100만원(2명의 파도)을 구매합니다.
2.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o off 전에 1만원(1명)을 적립합니다.
3. 홀이원 상금(상금)은 구매 시부터 100%로 적립됩니다. 상금의 90%를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1인 홀이원 상금으로 적립됩니다.)
4. 소수자는 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누락된 상금은 매일 상시(10:00)로 포스트에 게시됩니다.
6. 이벤트 홀은 일대일(10:00)로, 홀이원 상금 200만 원입니다.

진초록 양건다 카펫을 밟으려 평생을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항공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  
주요골프장: 061-7700-7777

##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실 분
- ▶교육 / 활동비등 550만원
- ▶특수물건만 취급
- ▶배우면서 투자가능

## 투자자 모집

- ▶낙찰받은 경 / 공매 물건
- ▶근저당설정 / 가등기로 보장
- ▶년10~30% 수익률
- ▶기간 : 1년정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